민선 5기 100일 맞은 광주 자치구 곳간 들여다보니

市지원 200억, 인건비 막기에 급급

5개구 부족예산만 670억 '재정적자 악순환'

체납세 징수·재산 매각·추진 사업 잇단 중단

최근 광주시가 재정난을 겪고 있는 5개 자치구에 200억원 상당의 재정지원에 나서면서 기초자치단체들이 당장 한숨은 돌리게 됐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의 부족예산이 동구 110억원·서구 115억원·남구 190억원·북구 41억원·광산구 214억원 등 모두 67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예산 지원은 '언 발에 오줌 누기' 격이라는 게 각 자치구의 볼멘 소리다.

7일 광주시 북구 등 5곳 기초자치단체에 따르면 동구·북구·광산구는 시에서 지원금을 받을 경우 부족한 직원 인건비로 90% 이상 사용할 계획이다. 서구·남구는 사회복지비와 각종 사업비 지원금으로 쓸 예정이다.

각 기초자치단체의 인건비 부족분은 ▲동구 79억원 ▲북구 40억원 ▲광산구 57억원 등 모두 156억원이다. 서구와 남구는 한 달 평균 39억원과 30억원의 인건비가 드는데, 이미 확보했다. 그동안 기초자치단체들은 체납세 징수·구 소유 재산 매각·각종 사업 취소 및 축소 등을 통해 재정난 타개를 모색해 왔다.

그러나 이 같은 방법은 효과가 거의 없어 광주시에의 예산지원만 바라고 있었던 기초자치단체는 결국 추진 중인 각종 사업을 연기하거나 재검토에 들어갔다.

북구는 우산 수영장 건립비·재난 안전기금 등 41억원의 예산이 여전히 부족하다. 5·18 정신계승 마라톤 대회 등 사업 취소 및 축소를 통해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고 있으나 여의치 않을 경우 해당 사업을 내년으로 연기할 계획이다.

서구는 금호 공영주차장 조성·청사 내 민방위훈련센터 건립공사를 내년으로 연기했다. 공사비 48억원은 예산에 편성, 사회복지비 등으로 쓸 예정이다.

동구도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남광주 역사 개발(20억원)과 문화전당 인근 우·오수관 설치사업(40억원)을 내년으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남구는 제석산~분적산 간 산림연결 복원 사업(26억원)과 자전거도로 개설(5억원) 등 구비 부담사업 30여개를 미루거나 축소했다. 부족한 예산은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 교부세를 받아 충당할 예정이다.

북구 관계자는 "재정 지원금이 얼마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시에서 예산 지원을 해 줄 경우 부족한 인건비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예산이 부족해 사업을 연기한 게 많은데, 이번 지원금으로 산적해 있는 각종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남구 관계자는 "이번 지원금으로 사회복지비 중 구비 부담 부족분을 채우는데, 사용할 것"이라면서 "대부분 사회복지 및 대민사업을 하고 있는 자치구에서 예산을 절감할 대상이 없으며, 체납세금 징수도 할 만큼 했지만 위기를 극복할 정도는 아니다. 모든 부서가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내년 지방채 발행한도 6400억 첫 삭감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방채 한도를 내년에 처음으로 줄여 지자체의 긴축 재정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광주·전남의 경우 대규모 사업이 없는 탓에 발행한도와 상관없이 그 절반 수준의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이어서 큰 영향은 없을 전망이다. 7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행안부가 정한 2011년 지방채 발행한도는 각각 1100억원, 1156억원이며, 광주는 이 중 500억원, 전남 역시 1000억원 미만의 지방채를 발행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대규모 지방채 발행이 예상되는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이 늦춰진 반면 매년 상환액을 늘려 지방채 규모가 큰 폭으로 줄었고, 전남도는 F1사업으로 인해 지방채가 다소 증가추세에 있으나 타 시·도에 비해서는 안정적인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지방채 잔액은 지난해 말 현재 각각 8098억원, 1조2262억원이다.

행안부는 이날 내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기초단체 포함)를 8조3373억원으로 제한해 올해 발행한도(8조9747억원)에 비해 6374억원을 감축했다. 지방채 발행한도는 지난 2006년 5조8649억원에서 2007년 6조4003억원, 2008년 7조1590억원 등으로 꾸준히 올랐고 작년에는 아예 한도가 없었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부터 지방채 발행 한도를 산출할 때 참고하는 지자체의 채무 상태를 3유형에서 4유형으로 세분화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형형색색 먹기 아까운 케익 7일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회 광주 국제 식품전·국제 소금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학생 제과 경진대회 출품작들을 둘러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명량대첩축제의 무한진화

참여 주민만 7000명 '블럭버스터급' 역사 재현

트위터·블로거 홍보에 체험행사도 대폭 늘려

전남도의 대표 축제인 명량대첩축제가 변신을 거듭하고 있다. 관광객 발길을 붙잡기 위해 지역 역사와 '문화'를 실감나게 덧 입히고 참여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는가 하면 트위터와 인터넷 블로거까지 활용하는 등 진화하고 있다.

◇'주민 참여, 블록버스터급'=8일부터 10일까지 해남군 우수영과 진도군 사이의 울돌목에서 펼쳐지는 '2010 명량대첩축제'의 특징은 관(官) 주도가 아닌 실질적인 대규모 주민 참여형 축제라는 점이다. 재현 행사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들만 7000명에 이른다.

축제 기간 동안 두 차례 펼쳐지는 명량해전 재현 행사의 경우 주민 1500명, 동원되는 어선만 107척에 이르고, 해상 전투 장면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4000만원 어치 이상의 화약이 쓰인다. 전투 과정이 무선 마이크와 영상을 통해 생중되는 점도 업그레이드됐다.

울돌목에 20m짜리 쇠줄 21개(420m)를 걸어 적선을 침몰시킨 전법을 재현하는데 400명이 참여하고 명량대첩 승리의 주역인 민초들의 구국정신을 되새기는 '약무호남 입성식'행사에 400명, 백의종군 뒤 삼도수군통제사로 복귀한 이순신 장군의 시가행진을 연출하는 '수군 재건 랠리'에는 200여명이 참가해 구례를 시작으로 곡성·순천·보성·장흥·강진·해남에 이르기까지 800리길에서 펼친다. 2km에 달하는 '평화만가행렬'을 위해서는 700여명이 움직이고 설화와 야사를 소재로 한 명량 21품 마당놀이는 해남·진도 21개 읍·면 주민들이 출연한다.

◇트위터로 관광객 발길 붙잡고='2010명량대첩축제' 홍보를 위해 트위터와 블로거를 사용한 점도 눈길을 끌고 있다.

트위터는 인터넷 블로그와 미니홈피, 메신저 등의 장점을 모아 놓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로, 휴대전화나 메신저, PC 등을 통해 알파벳 140자 미만의 짧은 글을 쉽고 편하게 올릴 수 있는 공간이다.

웹에 직접 접속하지 않아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나 스마트폰 등을 통해 글을 올리거나 받아볼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접속해 쌍방향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탓에 반응도 즉각적이고 확산 속도가 빨라 젊은층을 중심으로 인기가 높다.

전남도도 이같은 점을 최대한 활용했고 인기 블로거 운영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홍보도 펼치고 있다.

◇관광객 체험 행사 대폭 늘려=전년도에 비해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는 행사가 대폭 늘어났다. 수병훈련소 체험행사의 경우 타워가 설치돼 15m 높이에서 120m의 바다 위를 나는 체험이 가능하고, 관광객들이 해상에서 육지로 활을 쏘아 보는 체험 행사도 펼쳐진다. 480m의 진도대교에는 '회오리 파크'가 운영돼 회오리 골프 퍼팅, 연날리기, 탑쌓기 등을 체험할 수 있고 닻배 타고 고기잡기, 무인 인력선 등을 체험하는 기회도 제공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1인당 소득 3만달러, 인구 200만명

2015 전남발전 비전과 전략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인구 200만명'

전남도가 그리는 5년 뒤 목표다. 전국의 61.4%를 차지하는 1964개의 섬, 세계 5대 갯벌을 아우르는 1054㎢의 갯벌, 전국의 52%를 차지하는 친환경 농산물, 전국 41%에 이르는 태양광발전용량, 세계적인 조선산업과 철강산업 위치 등 전남만의 비교 우위의 자원을 활용해 멀지 않은 2015년 '누구나 살고 싶은 전남'의 미래상을 현실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전남발전연구원은 7일 이 같은 청사진을 담은 '2015년 전남발전 비전과 전략'이라는 최종 보고서를 내놓았다. 향후 전남도가 추구할 미래상을 담은 '마스터플랜'으로, ▲활력 넘치는 경제 ▲매력있는 문화·관광 ▲쾌적한 생활환경 기반을 마련해 '고소득 복지형 지역사회'를 건설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환황해·동북아 경제권 시대 전남의 그랜드 디자인 실현',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한 지역발전 구도 정립', '효율적 6대 부문 발전 전략 추진'이라는 부문별 전략을 수립했다.

세부 실천 과제도 제시했다. 우선 ▲서남해안 관광·레저 기업도시 건설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 ▲무안기업도시 건설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확충 ▲서남권경제자유구역 지정 ▲글로벌 농식품 물류기지 조성 등을 통해 전남이 동북 경제권 시대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전남발전연구원은 이를 통해 오는 2015년 전남의 1인당 총생산(GRDP)이 2만9000~3만4000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인구도 200만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건철 전남발전연구원 기획경영실장은 "'떠나가는'전남이 아닌, '찾아오는' 전남이 될 수 있도록 비교우위의 자원을 활용,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